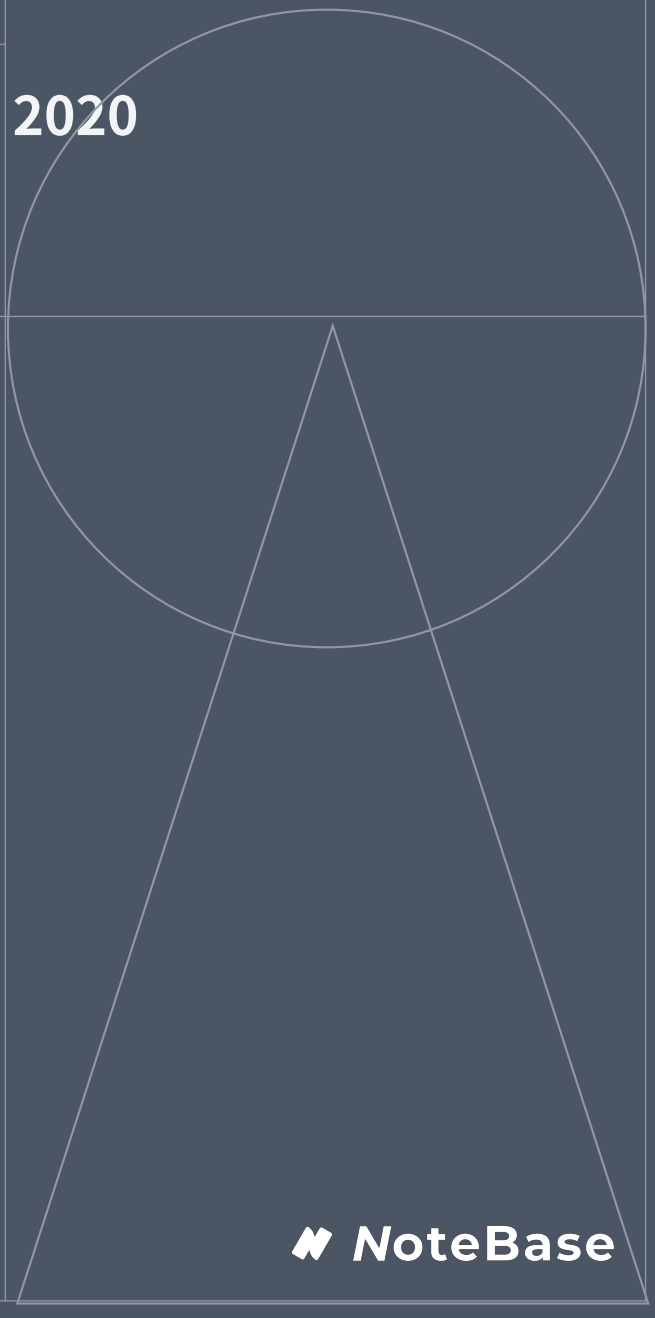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사회 · 2020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사회 · 2020

공무원/국가직/9급 · 사회 · 2020

문 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치 과정은 사회의 다양한 요구가 표출되는 (가), 정책 결정 기구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나), 산출된 정책에 대한 사회의 평가가 재투입되는 환류 과정을 의미한다.

① 정부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은 (가)에 해당한다.

② 정당이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는 것은 (나)에 해당한다.

③ (가)가 (나)에 잘 반영될수록 시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진다.

④ 향리형 정치문화가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나)보다 (가)가 활성화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시민의 요구인 투입이 정책의 결정·집행인 산출에 잘 반영되면, 시민은 **자신의 참여가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느낀다. 이러한 믿음이 정치적 효능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가)는 시민이나 집단이 정치 체계에 요구와 지지를 전달하는 '투입', (나)는 정책 결정 기구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산출'이다. 산출된 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시 투입하는 과정은 '환류'이다.

① X: 정부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은 공식적 정책 결정 기구가 법률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활동으로, **(나)인 산출**에 해당한다. 시민이나 집단이 정책 결정 기구에 요구를 전달하는 투입과 구별한다.

② X: 정당의 후보자 공천은 시민의 의사를 대변할 정치 담당자를 선발하는 정치적 충원 기능이다. 이는 시민의 의사가 정치 체계에 전달되도록 하는 활동이므로 **(가)인 투입**에 해당한다. (나)의 산출은 공식적 정책 결정 기구의 정책 결정과 집행이다.

③ O: 투입된 시민의 요구가 산출되는 정책에 잘 반영되면, 시민은 자신의 의견과 참여가 실제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게 된다. 이처럼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믿음**을 정치적 효능감이라고 하므로, 요구의 반영 정도가 높아질수록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진다.

④ X: 향리형 정치문화에서는 정치 체계나 정치 참여자로서의 자신에 대한 인식이 낮고, **투입과 산출 모두에 대한 관심이 미약하다**. 따라서 투입이 산출보다 활성화된다고 볼 수 없다. 시민이 정치 과정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참여형 정치문화의 특징이다.

NoteBase

문 2. 헌법상의 국가 기관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행정부 내 최고 심의 기관의 의장
B: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 등을 담당하는 기관

① A는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A는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③ B는 권한 쟁의 심판을 담당한다.
④ B는 사법부 소속의 독립성을 갖는 헌법 기관이다.

정답 2번

①

A는 국무회의의 의장인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임명되지 않는다.

대한민국헌법 제88조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대한민국헌법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A는 국무회의의 의장인 대통령으로,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대한민국헌법 제88조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대한민국헌법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대한민국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NoteBase

③

B는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등을 담당하는 감사원이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한다.

대한민국헌법 제97조 국가의 세입 ·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④

B인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의 헌법 기관**이므로 사법부 소속이 아니다.

대한민국헌법 제97조 국가의 세입 ·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NoteBase

문 3.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지방 자치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함)을 소환할 수 있다.

② 19세 이상의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주민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4번

①

주민소환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다.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소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자치법 제25조(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감사청구의 연령 요건은 **18세 이상**이므로 19세 이상 주민도 청구할 수 있다. 법정 청구 자격을 갖춘 주민이 조례상 필요한 수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으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 · 도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 · 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 · 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 · 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 ·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NoteBase

③

주민은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국민인 주민에게 이러한 지방선거 참여권이 인정된다.

지방자치법 제17조(주민의 권리)
③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④

이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주민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NoteBase

문 4. 국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국회는 국가 기관 구성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권을 가진다.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4번

①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한민국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14조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한민국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Note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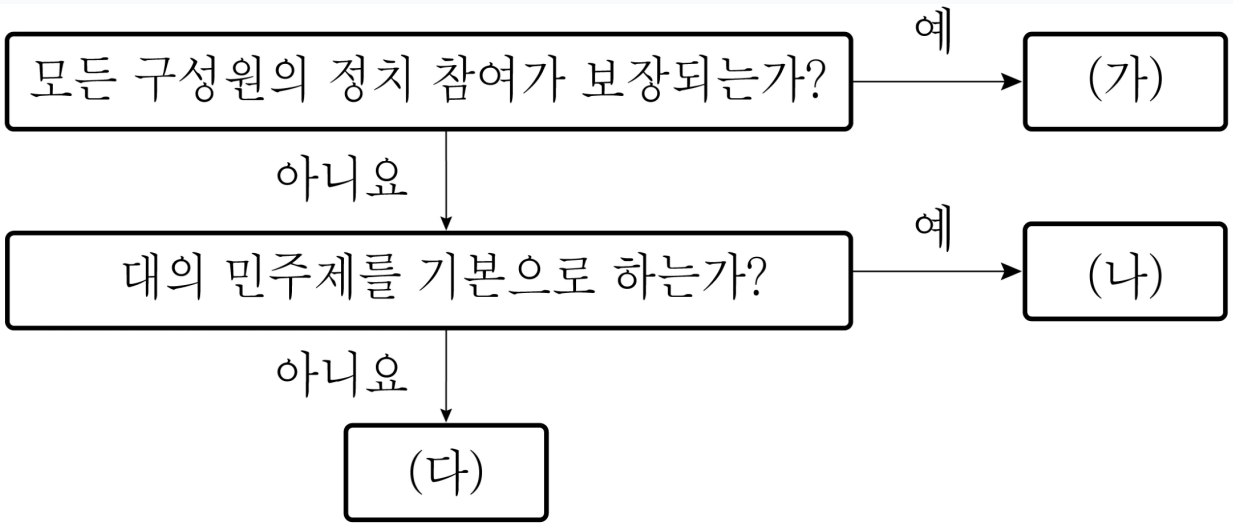
④

국회는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을 가지며, 이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류 제출, 증인 출석·증언,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NoteBase

문 5. 그림의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 (다)는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 근대 민주정치, 현대 민주정치 중 하나이다)



① (가)는 시민이 직접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 형태이다.

② (나)의 사상적 배경은 계몽사상과 사회계약설이다.

③ (가), (나)의 공통점은 보통 선거 제도를 확립한 것이다.

④ (가), (다)의 공통점은 여성의 정치 참여가 제도화된 것이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대의 민주제를 기본으로 하지만 모든 구성원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지 못한 (나)는 **근대 민주정치**이다. 인간의 이성과 자유·평등을 강조한 **계몽사상**, 국가 권력의 근거를 구성원의 합의에서 찾은 **사회계약설**이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그림에서 모든 구성원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가)는 현대 민주정치이다. 정치 참여에 제한이 있으면서 대의 민주제를 기본으로 하는 (나)는 근대 민주정치이고, 대의 민주제를 기본으로 하지 않는 (다)는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이다.

① X: (가)는 현대 민주정치로, 시민이 대표자를 선출하여 국가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대의 민주제**를 기본으로 한다. 시민이 직접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직접 민주정치를 기본으로 한 것은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인 (다)이다.

② O: (나)는 근대 민주정치이다. 계몽사상은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고 자유와 평등을 강조했으며, 사회계약설은 국가와 정치 권력이 구성원의 합의에 근거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상은 **왕의 절대 권력을 비판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시민 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③ X: **보통 선거 제도의 확립은 현대 민주정치인 (가)의 특징**이다. 보통 선거는 재산이나 성별 등을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는 제도이다. 근대 민주정치인 (나)에서는 재산·성별 등에 따른 제한 선거가 이루어졌으므로 두 정치 형태의 공통점으로 볼 수 없다.

④ X: 현대 민주정치인 (가)에서는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된다. 반면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인 (다)에서는 **여성·노예·외국인이 정치 참여에서 배제**되고 성인 남성 시민만 참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여성의 정치 참여가 제도화되었다는 것은 두 정치 형태의 공통점이 아니다.

NoteBase

문 6. 국제법의 법원(法源)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중 하나이다)

(가)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
(나)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교토 의정서

① (가)는 국제 행위 주체 간의 합의가 명시적 문서로 작성된 것이다.
② (나)는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이다.
③ (다)는 국제 사회의 관행이 국제 사회에서 법으로 승인된 것이다.
④ 우리나라에서 (가), (나)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답 2번

①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인 (가)는 **국제 관습법**에 해당한다. 국제 행위 주체 간의 합의를 명시적 문서로 작성한 것은 조약이다.

②

(나)는 **법의 일반 원칙**으로, 여러 국가의 법체계에서 공통으로 인정되는 보편적인 법 원칙이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제1항 다목
다. 문명국이 인정하는 법의 일반원칙

③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교토 의정서는 **국가 간 합의를 문서로 작성한 조약**이다. 일반적 관행이 법으로 승인되어 성립하는 것은 국제 관습법이다.

④

(가), (나)와 같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별도의 국내 입법 절차 없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NoteBase

문 7.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법원은 □□법 일부 조항이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며 A에 (㉠)을 제청하였다.
○ △△법 위반으로 기소된 갑은 1심 재판 중 해당 법 조항에 대해 법원에 (㉡)을 신청한 후, 기각되자 A에 (㉢)을 청구하였다.

① A의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당 법률조항은 위헌으로 결정된다.
② 법원이 ㉠을 제청하기 위해서는 소송 당사자의 제청 신청이 있어야 한다.
③ 갑이 법원에 신청한 ㉡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다.
④ ㉠은 위헌법률심판이고, ㉢은 권한쟁의심판이다.

정답 3번

①

A는 헌법재판소이다. 법률의 위헌결정에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단순 과반수가 아니라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②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NoteBase

③

갑은 자신의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도록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④

㉠은 **법원이 제청하는 위헌법률심판**이다. ㉢은 **제청신청이 기각된 당사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NoteBase

문 8.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과 을은 법률상의 부부이다. 혼인 생활을 유지하던 중 갑은 을의 심각한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을에게 ㉠ 협의상 이혼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을은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갑은 가정법원에 ㉡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다.

① ㉠의 효력은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은 즉시 발생한다.
② ㉠과 달리 ㉡에서만 을은 갑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③ ㉠, ㉡ 모두 법원을 거쳐야만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④ ㉡은 법률로 정한 이혼의 사유나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정답 3번

①

㉠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이혼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혼 의사 확인만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는 않는다.

민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1977.12.31, 2007.5.17>

②

재산분할청구권은 ㉠ **협의상 이혼과** ㉡ **재판상 이혼 모두에서 인정**된다. 을은 어느 방식으로 이혼하든 갑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NoteBase

③

㉠은 **가정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이 필요하고, ㉡은 **가정법원의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두 경우 모두 법원이 관여한다.

민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1977.12.31, 2007.5.17>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④

㉡ 재판상 이혼에는 **법률이 정한 이혼 사유가 필요**하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그 사유 중 하나이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NoteBase

문 9.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을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체포되었다. 경찰은 갑을 ㉠구속 수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갑은 기소되었다. 그 이후 갑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석방되었고, 국민 참여 재판이 열렸다. ㉢1심 법원은 갑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① 검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한 후 ㉠ 여부를 결정한다.

② ㉡을 위해 갑은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하였다.

③ ㉢은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이다.

④ ㉣은 선고 후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된다.

정답 3번

①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를 심문하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판사**이다.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 · 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

기소된 갑은 피고인이므로 석방을 구하기 위해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 · 가족 ·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NoteBase

③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진행한다. 지원 합의부의 관할 사건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때에는 본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0조(지방법원 지원 관할 사건의 특례)
① 제8조에 따라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제9조제1항의 배제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결정을 하여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

집행유예는 **실효·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이다. 갑의 경우 그 기간은 2년이며, 형의 선고가 있었던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NoteBase

문 10.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갑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을은 잦은 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A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 갑과 을은 각각 B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B 지방 노동 위원회는 갑의 구제신청은 받아들이고 을의 구제신청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보기>
ㄱ. 갑, 을 모두 지방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ㄴ. 을은 B 지방 노동 위원회의 기각 결정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A 회사 사용자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ㄷ. B 지방 노동 위원회는 갑의 해고에 대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A 회사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ㄹ. A 회사의 노동조합은 갑과 을의 해고에 대해 B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정답 1번

ㄱ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와 **민사상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별개의 권리구제 수단**이다. 구제신청이 인용된 갑과 기각된 을 모두 A 회사를 상대로 지방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하여 구제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22100 판결 등 참조), 설령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재심판정이 적법하여 사용자가 구제명령에 따른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정하는 것일 뿐 해고가 유효하다거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근로자는 그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NoteBase

ㄴ

을은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법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被告)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ㄷ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마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갑의 해고에 대해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면 A 회사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내려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구제명령)
①노동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NoteBase

ㄹ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갑의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이므로 **노동조합도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잦은 결근을 이유로 한 을의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구제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12.30, 2010.1.1, 2020.6.9, 2021.1.5>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NoteBase

문 11. 다음 대화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회사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원 개개인의 능력입니다. 변화가 필요한 곳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배치한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을: 아무리 뛰어난 직원이라도 현재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 속에서는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① 갑의 입장은 집단의 속성을 개인 속성의 총합과 같다고 본다.
② 갑의 입장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토대로 하면서 사회 유기체설에 기반을 둔 주장과 일치한다.
③ 을의 입장은 사회가 개인들 간의 합의에 따라 움직인다고 본다.
④ 을의 입장은 사회를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추구하기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본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갑은 회사의 성과를 직원 개개인의 능력으로 설명하므로 **사회 명목론**의 입장이다. 이 관점에서는 사회가 개인과 별개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개인들의 집합이므로, 집단의 속성을 **개인 속성의 총합**으로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갑은 능력이 뛰어난 직원을 배치하면 회사의 성과가 좋아진다고 보므로 개인을 중심으로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사회 명목론의 입장이다. 을은 뛰어난 직원도 조직 문화의 영향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므로 사회가 개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실체로서 개인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회 실재론의 입장이다.

① O: 사회 명목론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개인이며 사회는 개인들의 집합에 붙인 이름이라고 본다. 따라서 사회 자체의 독자적인 속성보다 구성원 개개인의 특성에 주목하며, 집단의 속성을 **개인 속성의 총합**으로 이해한다. 직원의 능력 향상과 배치를 회사 성과 개선의 핵심으로 보는 갑의 주장과 연결된다.

② X: 갑의 사회 명목론이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토대로 한다는 부분은 적절하지만, 사회 유기체설에 기반을 둔다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 사회 유기체설은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에, 개인을 그 구성 부분에 비유하여 사회 전체의 독자성과 구성 부분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므로 **사회 실재론**과 연결된다.

③ X: 사회가 개인들 간의 합의에 따라 움직인다고 보는 것은 **사회 명목론**의 설명이다. 을의 사회 실재론은 사회의 제도나 규범이 개인의 의사와 별개로 존재하며 개인의 행동을 제약한다고 본다. 을이 개인의 능력보다 조직 문화의 개선을 우선하는 것도 조직 문화가 개인의 성과를 제약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④ X: 사회를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은 **사회 명목론**이다. 이 관점에서는 개인이 사회보다 본질적인 존재이며 사회는 개인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형성된다. 을의 사회 실재론은 사회를 개인의 목적을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환원하지 않고,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독자적인 실체로 본다.

NoteBase

문 12. 다음 글을 읽고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 ‘골드 러시’라고 불리는 미국 서부 개척 시대였던 1853년, 한 독일 출신 청년이 광부들의 작업복이 쉽게 찢어지는 것을 보고, ㉠텐트용으로 생산된 두꺼운 천으로 바지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바지는 광부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이 청년의 이름을 따서 바지 상표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청바지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는 청바지가 6·25 전쟁 때 참전한 미군으로부터 소개된 후, 생맥주, 통기타 등과 어우러지면서 청년 문화의 상징이 되었다가 지금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입는 옷이 되었다.
◯ 19세기 이후 서구 열강의 지배를 받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에 서양 문물이 전해졌는데, 그중에는 종교도 있었다. ㉢많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로 건너가 기독교를 전파함으로써 ㉣아프리카 고유의 토속신앙이 사라지고 서양 종교인 기독교로 종교가 대체되기도 하였다.

<보기>
ㄱ. ㉠은 알려지지 않았던 문화 요소를 찾아내는 발견에 해당한다.
ㄴ. ㉡은 외재적 변동에 해당한다.
ㄷ. ㉢은 간접전파에 해당한다.
ㄹ. ㉣은 문화변동의 결과 중 문화동화의 사례에 해당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미군을 통해 청바지가 들어온 것은 **외부 문화의 유입에 따른 변동**이다. 토속신앙이 사라지고 기독교로 대체된 것은 기존 문화가 외래 문화에 흡수되는 **문화동화**에 해당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X: ㉠은 기존의 천을 활용하여 새로운 의복을 만들어 낸 **발명**이다. 발견은 이미 존재하지만 알려지지 않았던 문화 요소를 찾아내는 것이므로, 새로운 바지를 만든 사례와 구별된다.

ㄴ. O: ㉡은 미국의 문화 요소인 청바지가 미군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례이다.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가 전해져 나타나는 변동이므로 **외재적 변동**에 해당한다.

ㄷ. X: ㉢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로 직접 건너가 현지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전한 **직접전파**이다. 간접전파는 책이나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문화 요소가 전달되는 것이다.

ㄹ. O: ㉣에서는 아프리카의 토속신앙이 사라지고 외래 문화인 기독교로 대체되었다.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한 뒤 한쪽 문화가 고유한 성격을 잃고 다른 문화에 흡수되는 **문화동화**에 해당한다.

옳은 보기는 ㄴ, ㄹ이며, 이 조합은 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3. 다음 글을 읽고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 (㉡),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제도인 (㉣)은(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인 (㉤)은(는) 업무와 관련하여 질병이나 장애를 얻거나 또는 사망할 경우, 본인의 치료비와 가족에게 생계비를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보기>
ㄱ. ㉠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지만, ㉡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다.
ㄴ. ㉠의 수혜자는 ㉢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ㄷ. 기초연금제도는 ㉡에 해당한다.
ㄹ. ㉣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ㄴ, ㄷ, ㄹ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공공부조를 받더라도 돌봄·재활 등의 **사회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다**. 업무상 재해에 따른 치료와 생활 보장을 담당하는 제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은 공공부조이다.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에 보험 방식으로 대응하는 ㉡은 사회보험이며, 나머지 ㉢은 돌봄·상담·재활 등을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이다.

ㄱ. X: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모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공공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하여 소득 격차를 줄인다. 사회보험도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고소득 가입자보다 저소득 가입자의 납부 보험료 대비 연금 급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도록 설계되어 있다.

ㄴ. O: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수혜 대상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공공부조 수급자도 해당 서비스의 이용 요건을 충족하면 돌봄·재활 등의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급여와 일상생활을 돕는 서비스는 함께 제공될 수 있다.

ㄷ. X: 기초연금제도는 ㉡인 사회보험이 아니라 ㉠**인 공공부조**에 해당한다.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세를 재원으로 소득·재산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이름에 '연금'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

ㄹ. O: ㉣은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은 업무상 부상·질병·장해·사망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휴업급여·유족급여 등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ㄹ이며, 이 조합은 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4. 자료수집 방법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A~C는 질문지법, 참여관찰법, 문헌연구법 중 하나이다)

비교 항목	비교 결과
자료수집 방법의 구조화·표준화 정도	A < C
조사대상자들의 상호작용 파악 용이성 정도	B, C < A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접근이 어려운 사회·문화 현상 탐구 용이성 정도	A, C < B

※ 낮음 또는 작음 < 높음 또는 큼

① A는 조사대상자와 연구자의 의사소통을 전제로 한다.

② B는 수집된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③ C는 양적 자료보다 질적 자료의 수집에 적합하다.

④ A와 달리 C는 문맹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기법이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B는 과거의 기록을 활용하는 **문헌연구법**이다. 기존 자료를 선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표에서 오래되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에 가장 유리한 B는 기존 기록을 활용하는 문헌연구법이다. 조사대상자들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가장 쉬운 A는 그들의 생활 현장에 참여하여 행동을 관찰하는 참여관찰법이다. 따라서 C는 미리 정한 질문과 응답 형식을 사용하는 질문지법이며, 참여관찰법보다 자료수집 방법의 구조화·표준화 정도가 높다.

① X: A인 참여관찰법은 조사대상자의 생활에 참여하면서 행동과 상호작용을 관찰하여 자료를 얻는다. 대상자와 대화할 수는 있지만, 자료수집에 **연구자와 대상자의 의사소통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을 얻는 질문지법이나 면접법과 구별된다.

② O: B인 문헌연구법은 책, 기록물 등 기존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방법이다. 어떤 자료를 선택하고 그 내용을 어떤 의미로 해석할지 연구자가 판단하므로, **자료 해석에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

③ X: C인 질문지법은 동일한 질문과 응답 형식으로 여러 사람의 답을 수집하므로, 응답을 수치로 정리하고 비교하기 쉽다. 따라서 질적 자료보다 **양적 자료의 수집에 적합**하다. 행동의 맥락과 의미를 깊이 있게 파악하는 질적 자료의 수집에는 참여관찰법이 적합하다.

④ X: C인 질문지법은 조사대상자가 질문을 읽고 응답해야 하므로 **문맹자를 대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반면 A인 참여관찰법은 대상자의 행동을 관찰하므로, 대상자가 글을 읽고 쓸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NoteBase

문 15. 다음은 갑국의 계층별 인구 구성 변화를 요약한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의 총인구는 2000년 이후 1,000만 명으로 변화가 없다)

◯ 2005년: 상층 인구보다 중층 인구는 4배 많고, 하층 인구는 상층 인구보다 5배 많다.
◯ 2010년: 2005년에 비해 상층 인구는 2배 증가했고, 하층 인구는 1/2로 감소하였다.
◯ 2015년: 2005년에 비해 중층 인구는 1/2로 감소했고, 하층 인구는 동일하다.

① 2005년의 계층 구조는 2015년과 달리 모래시계형이다.
② 2005년의 하층 인구는 같은 해 상층과 중층의 인구를 합한 것보다 많다.
③ 2010년의 상층 인구와 2015년의 상층 인구는 같다.
④ 2010년의 사회 구조가 2005년과 2015년에 비해 더 안정적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2010년은 중층 인구가 550만 명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하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이다. 중층이 두터우면 상층과 하층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는 완충 역할을 하므로, 중층 비중이 더 작은 2005년과 2015년보다 사회 구조가 안정적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2005년 상층·중층·하층의 인구 비는 1 : 4 : 5이다. 총인구가 1,000만 명이므로 상층 인구는 $\frac{1,000}{1+4+5} = 100$만 명이며, 중층은 400만 명, 하층은 500만 명이다. 이후에도 총인구가 일정하므로 두 계층의 인구를 알면 나머지 계층의 인구는 전체에서 두 계층의 인구를 빼서 구한다.

① X: 2005년은 상층 100만 명, 중층 400만 명, 하층 500만 명으로 아래 계층일수록 인구가 많아지는 **피라미드형**이다. 2015년은 중층이 200만 명으로 줄고 하층은 500만 명으로 유지되므로 상층은 1,000 - 200 - 500 = 300만 명이다. 따라서 중층이 상층과 하층보다 적은 모래시계형은 2015년이다.

② X: 2005년 하층 인구는 500만 명이고, 상층과 중층의 인구를 합하면 100 + 400 = 500만 명이다. 하층 인구는 두 계층의 합보다 많은 것이 아니라 **그 합과 같다**.

③ X: 2010년 상층 인구는 2005년의 2배인 100 × 2 = 200만 명이다. 2015년 중층 인구는 $400 \times \frac{1}{2} = 200$만 명이고 하층은 500만 명이므로, 상층은 1,000 - 200 - 500 = 300만 명이다. 두 해의 상층 인구는 같지 않으며 **2015년이 100만 명 더 많다**.

④ O: 2010년 하층 인구는 $500 \times \frac{1}{2} = 250$만 명이고 상층은 200만 명이므로, 중층은 1,000 - 200 - 250 = 550만 명이다. 이는 전체의 55%로, 2005년의 40%와 2015년의 20%보다 높다. 2010년은 중층이 가장 많은 다이아몬드형이며, **두터운 중층이 상층과 하층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므로 다른 두 해보다 사회 구조가 안정적이다.

NoteBase

문 16.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제 상황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채권자는 유리해지고 채무자는 불리해진다.
ㄴ. 환율의 변화가 없는 경우,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ㄷ. 고정된 임금을 받는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ㄹ. 실물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화폐 자산을 보유한 사람에 비해 불리해진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물가가 오르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의 양이 줄어 **고정된 명목소득의 구매력**이 떨어진다. 환율과 외국 물가가 그대로라면 국내 상품의 상대적 가격이 높아져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어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이는 화폐 한 단위의 구매력이 낮아지는 현상이다.

ㄱ. X: 채권자는 돈을 받을 사람이고 채무자는 돈을 갚을 사람이다. 갚을 금액이 명목액으로 정해져 있다면, 물가 상승으로 그 돈의 실질 가치가 낮아진다. 따라서 **채권자는 불리해지고 채무자는 유리해진다**. 채권자는 돌려받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이 줄고, 채무자는 실질적인 상환 부담이 줄기 때문이다.

ㄴ. O: 환율이 변하지 않고 외국 물가 등 다른 조건이 같다면, 국내 물가 상승으로 **국내 상품이 외국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진다**. 이에 따라 국내 상품의 수출이 줄고 외국 상품의 수입이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난다. 수출 대금의 유입은 줄고 수입 대금의 유출은 늘어나므로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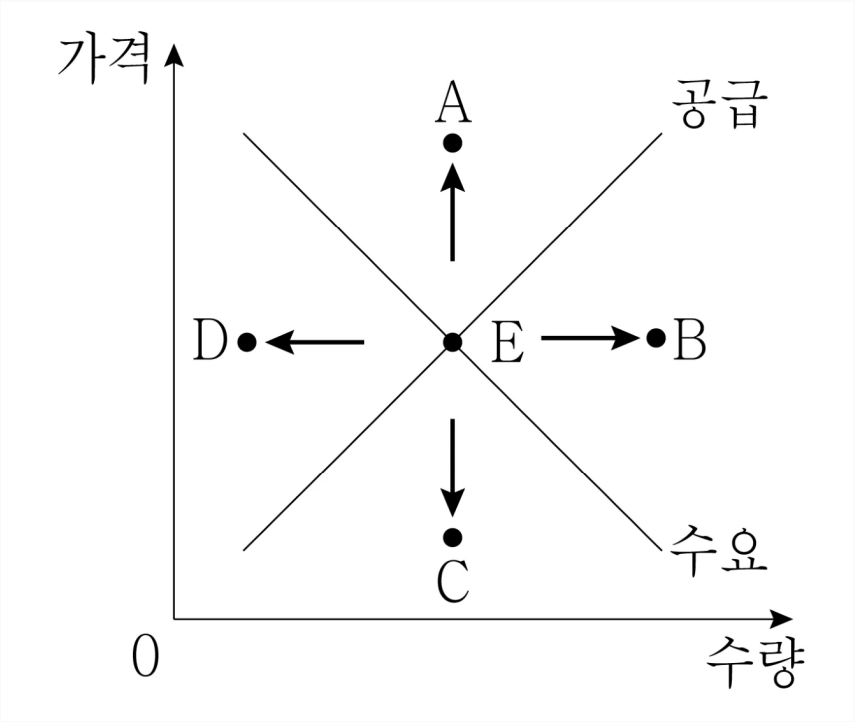
ㄷ. O: 명목소득은 화폐 금액으로 표시한 소득이고, 실질소득은 그 소득으로 살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양을 나타낸다. 임금의 명목액이 고정되어 있는데 물가가 오르면 같은 임금으로 살 수 있는 양이 줄어 **실질소득이 감소한다**.

ㄹ. X: 토지·건물 같은 실물 자산은 물가가 오를 때 가격도 함께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현금처럼 명목액이 고정된 화폐 자산은 물가 상승으로 구매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실물 자산 보유자가 화폐 자산 보유자보다 유리해진다**. 이는 모든 실물 자산의 가격이 반드시 오른다는 뜻은 아니다.

옳은 보기는 ㄴ, ㄷ이며, 이 조합은 ③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7. 그림은 X재 시장의 균형점 E의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X재의 생산 기술이 발전하고 X재에 대한 수요자의 선호가 감소하면, E는 A로 이동할 수 있다.

② X재의 생산 기술이 발전하고 X재 수요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E는 B로 이동할 수 있다.

③ X재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X재의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E는 C로 이동할 수 있다.

④ X재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X재의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면, E는 D로 이동할 수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X재가 정상재라면 소득 증가로 수요가 늘고, 생산 기술 발전으로 공급도 늘어난다. 이때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며, 수요 증가의 가격 상승 효과와 공급 증가의 가격 하락 효과가 상쇄되면 가격은 그대로여서 E가 B로 이동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그림에서 세로축은 가격, 가로축은 수량이다. E를 기준으로 A는 가격만 상승, B는 거래량만 증가, C는 가격만 하락, D는 거래량만 감소한 상태이다. 수요나 공급의 증가는 해당 곡선의 오른쪽 이동, 감소는 왼쪽 이동을 뜻한다.

① X: 생산 기술이 발전하면 같은 가격에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어 공급이 증가한다. 선호가 감소하면 같은 가격에서 사려는 양이 줄어 수요가 감소한다. 공급 증가와 수요 감소는 모두 **균형 가격을 하락**시키므로 가격이 상승하는 A로는 이동할 수 없다. 거래량은 두 변화의 크기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그대로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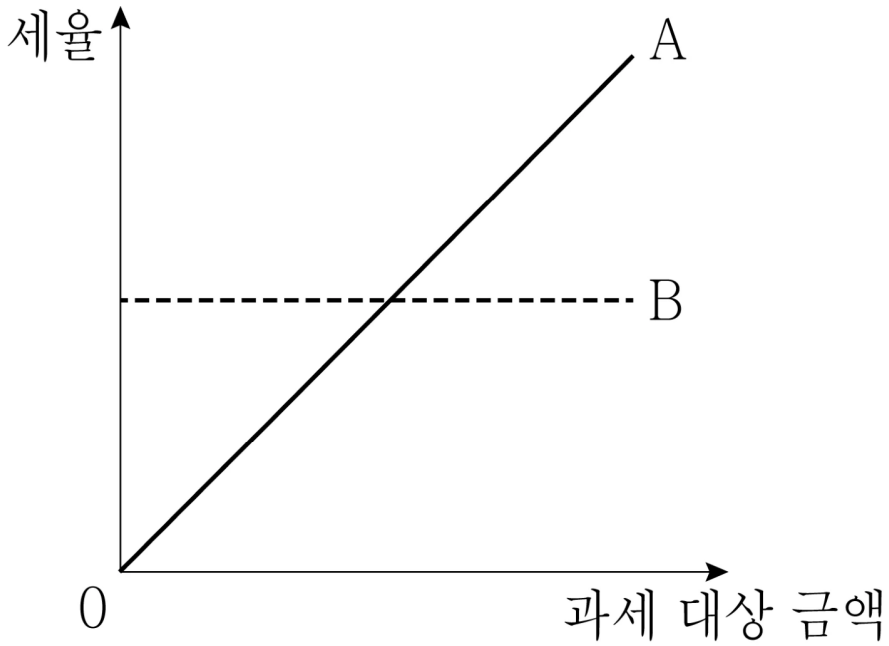
② O: 생산 기술 발전은 공급을 증가시킨다. X재가 **정상재인 경우** 소득 증가는 수요를 증가시킨다. 공급 증가와 수요 증가는 모두 균형 거래량을 늘리지만, 공급 증가는 가격을 낮추고 수요 증가는 가격을 높인다. 두 가격 효과가 상쇄되면 **가격은 그대로이고 거래량만 증가**하므로 E는 B로 이동할 수 있다. 정상재라는 조건에서 가능한 이동이므로 '이동할 수 있다'는 설명이 성립한다.

③ X: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생산 비용이 줄어 공급이 증가한다.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X재를 사려는 사람이 늘어 X재의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므로 **균형 거래량은 반드시 증가**한다. 따라서 거래량이 그대로인 C로는 이동할 수 없으며, 가격의 상승·하락·불변 여부는 두 변화의 크기에 달려 있다.

④ X: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 비용이 늘어 공급이 감소한다. 보완재는 함께 소비하는 재화이므로 그 가격이 하락하면 X재의 수요가 증가한다. 공급 감소와 수요 증가는 모두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므로 가격이 그대로인 D로는 이동할 수 없다. 거래량은 두 변화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며, 거래량 변화가 상쇄되면 가격만 상승하는 A로 이동할 수 있다.

NoteBase

문 18. 그림은 조세를 세율의 적용 방식에 따라 두 가지 유형 A와 B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부가 가치세에는 주로 A가 적용된다.

②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에는 주로 B가 적용된다.

③ 직접세는 일반적으로 A보다는 B를 적용한다.

④ 소득 재분배 효과는 B에서보다 A에서 크게 나타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A는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B는 세율이 일정한 비례세이다. 누진세는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므로 비례세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그림의 가로축은 과세 대상 금액, 세로축은 세율이다. A는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이고, B는 과세 대상 금액과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한 비례세이다.

① X: 부가 가치세에는 주로 **B인 비례세**가 적용된다.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지더라도 같은 세율을 적용하므로, 세액은 늘어나지만 세율은 일정하다.

② X: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에는 주로 **A인 누진세**가 적용된다. 과세 대상 소득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③ X: 직접세는 일반적으로 B인 비례세보다 **A인 누진세**를 적용한다. 소득세처럼 소득에 직접 부과하는 세금은 납세자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소득이 클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④ O: A인 누진세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의 더 큰 비율을 세금으로 부담하게 한다. 따라서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B인 비례세보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세후 소득 격차를 줄이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NoteBase

문 19. 표는 총수요나 총공급의 변동이 국민 경제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총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며 총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또한 A, B는 총수요, 총공급 중 하나이다)

구분	균형 물가 수준	균형 실질 GDP
A만 증가	상승	㉠
B만 감소	상승	㉡
(가)	하락	증가

① A는 총공급, B는 총수요이다.

② ㉠과 ㉡은 모두 '증가'이다.

③ (가)에는 'B만 증가'가 들어갈 수 있다.

④ 정부 지출의 증가는 (가)의 원인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총공급이 증가하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이 늘어 **균형 물가 수준은 하락하고 균형 실질 GDP는 증가**한다. 표에서 B는 총공급이므로 (가)에는 'B만 증가'가 들어갈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표에서 A만 증가할 때 균형 물가 수준이 상승하므로 **A는 총수요, B는 총공급**이다. 총수요가 증가하면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균형 물가 수준과 균형 실질 GDP가 모두 상승한다. 반면 총공급이 증가하면 총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균형 물가 수준은 하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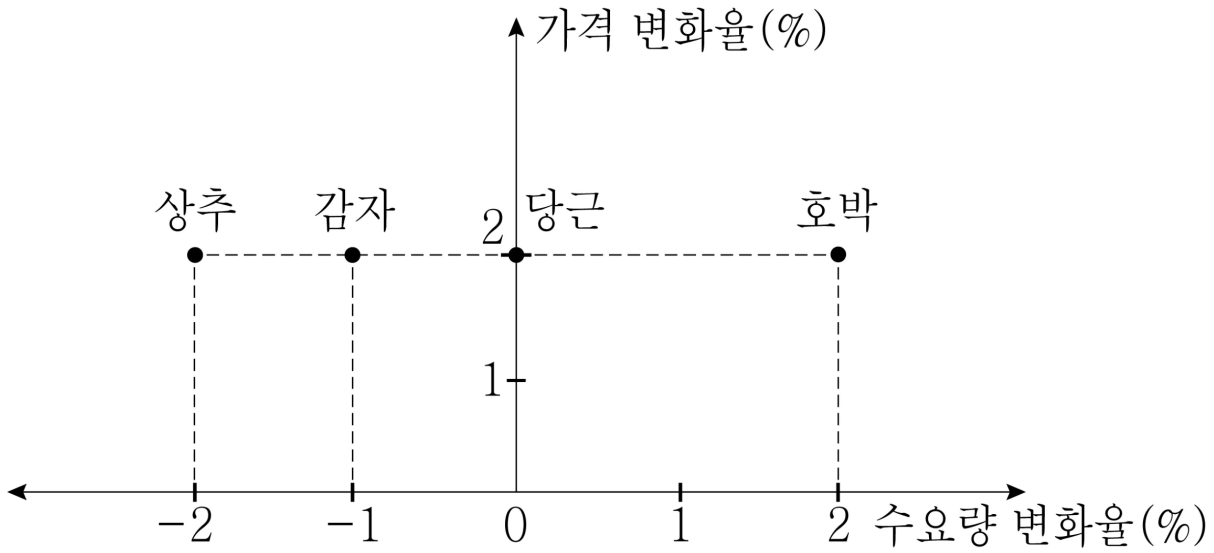
② X: ㉠은 '증가', ㉡은 **'감소'**이다. A인 총수요만 증가하면 생산과 거래가 확대되어 균형 실질 GDP가 증가한다. B인 총공급만 감소하면 총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므로 균형 물가 수준은 상승하지만 균형 실질 GDP는 감소한다.

③ O: B인 총공급만 증가하면 총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총수요 곡선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새 균형은 기존 균형보다 **물가 수준이 낮고 실질 GDP가 큰** 지점에 형성된다. 이는 (가) 행의 '균형 물가 수준 하락, 균형 실질 GDP 증가'와 일치하므로 'B만 증가'가 들어갈 수 있다.

④ X: 정부 지출은 총수요의 구성 요소이므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총수요가 증가**한다.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균형 물가 수준과 균형 실질 GDP가 모두 상승하므로, 물가 수준이 하락하는 (가)를 설명하지 못한다. (가)는 총공급 증가로 설명할 수 있다.

NoteBase

문 20. 그림은 가격이 2% 상승했을 때 각 재화의 수요량 변화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① 감자와 호박의 판매수입은 각각 증가하였다.

② 당근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이다.

③ 상추 판매수입은 감소하고, 당근 판매량은 감소하였다.

④ 상추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감자는 가격이 2% 오르는 동안 수요량이 1%만 줄어 판매수입이 증가한다. 호박은 **가격과 수요량이 모두 2% 증가**하므로 판매수입도 증가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그림의 가로축은 수요량 변화율, 세로축은 가격 변화율이다. 가격이 모두 2% 상승했을 때 수요량은 상추가 2% 감소하고, 감자가 1% 감소하며, 당근은 변하지 않고, 호박은 2% 증가한다. 판매수입은 가격에 판매량을 곱한 값이므로, 변화 후 가격과 판매량이 각각 원래의 몇 배인지를 곱해 판매수입의 변화를 구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의 비율을 절댓값으로 나타낸다.

① O: 감자는 가격이 원래의 1.02배, 판매량이 0.99배가 되어 판매수입이 $1.02 \times 0.99 = 1.0098$배로 늘어난다. 즉 0.98% 증가한다. 호박은 가격과 판매량이 각각 1.02배가 되어 판매수입이 $1.02 \times 1.02 = 1.0404$배, 즉 4.04% 증가한다. 두 재화 모두 **가격과 판매량을 곱한 값이 증가**한다.

② X: 당근은 가격이 2% 상승해도 수요량 변화율이 0%이므로 탄력성은 $\frac{0}{2} = 0$이다. 따라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탄력적 수요는 같은 가격에서 수요량이 달라질 수 있는 수평 수요 곡선으로 나타나며,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이 그대로인 경우와 구별된다.

③ X: 당근의 수요량 변화율은 0%이므로 판매량은 **감소하지 않고 일정**하다. 상추는 가격이 원래의 1.02배, 판매량이 0.98배가 되므로 판매수입은 $1.02 \times 0.98 = 0.9996$배이다. 주어진 변화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상추 판매수입은 0.04% 감소하지만, 당근 판매량이 감소했다는 부분은 성립하지 않는다.

④ X: 상추는 가격 상승률과 수요량 감소율의 절댓값이 모두 2%이므로 탄력성은 $\frac{2}{2} = 1$이다. 따라서 **단위 탄력적**이다. 탄력적 수요라면 수요량 변화율의 절댓값이 가격 변화율의 절댓값보다 커서 탄력성이 1보다 커야 한다.

NoteBase